

OECD Insights

**Human Capital: How what you know shapes your life**

Summary in Korean

OECD 총관

**인적 자본: 당신이 가진 지식이 당신의 인생을 좌우하는 요소**

국어 개요

지난 20 년간 직장세계는 엄청난 변화를 보았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전체 노동인력 가운데 제조업 일자리는 일찍이 없던 소규모 비중을 차지하고 제조업 부문의 급료는 나머지 부문의 수준을 거의 따라잡지 못했다. 이제는 콜센터 근로자에서 건축가, 교사, 금융계 고용인 사이에 있는 모든 직종을 포함한 ‘지식’ 근로층 범주가 점점 선진국의 경제성공에 핵심요소가 된다.

개인과 국가가 이러한 지식경제 출현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국민 개개의 교육, 기술, 재능, 능력을 함축하는 인적자본에 대폭 좌우된다. 따라서 국가정부는 인적자본 수준을 향상키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한편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의 한 가지가 현재 경제성장축진 요소로 중요성이 더해 가는 교육 및 훈련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체로 4-5 세에서 10 대 후나 20 대 초반에 걸쳐 이뤄지는 정식교육은 인적자본 형성에서 일부 역할만을 수행한다. 여러 면에서 인적자본형성사안은 교육 차원보다는 생애에 걸친 지속 과정으로써의 ‘학습’차원에서 간주함이 크게 유용하다.

경제 및 고용 시점에서는 이러한 평생학습 차원의 인적잠재가 일찍이 없던 중요성을 띠는 상황이다. 이전의 오래된 일자리는 노동비가 저렴한 지역으로 이전되어지고 급변하는 기술은 얼마 전까지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일자리나, 업무 수행상 필요한 근로자 지식을 완전 일변시키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점이다. 그 결과, 이제 근로자들은 근로생애 내내 본인 기술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개요에서는 인적자본의 개념, 경제성장에 있어 그 중요성 증대, 정부와 사회가 영유아기, 정식교육 기간, 성인 기간에 맞추어 인적자본개발을 위해 할 수 있는 사항 등을 살펴본다.

## 인적자본이란?

인적자본 개념은 18세기 스코틀랜드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의 연구작업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경제개념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50년대 후반과 60년대에 이르러서였다. 이 무렵에 테오도르 슈츠 같은 경제학자들은 경제 성장 및 번영 초래에 기여하는 교육과 전문성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이를 경제학의 오래된 개념인 ‘자본’에 비교하기 시작했다.

이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이 각자 교육과 훈련에 투자함으로써 장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능력자원 즉 자본을 구축한다고 주장했다. 이 투자는 또한 국가경제에 이익이 되어 경제성장 촉진을 도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적자본은 교육·훈련을 통해 습득한 기술 및 학식은 물론 개인의 타고난 재주와 능력까지 통틀어 혼합한 폭넓은 의미로 정의되고 때로 건강도 포함시킨다. 이에 반해 인적자본개념 수용에 열심이었던 기업세계는 인적자본을 기업 성공에 직접 관련성이 있거나 기업특유 성격을 띤 노동력의 기술과 재능에 주로 한하여 간주하는 좁은 의미로써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

## 인적자본은 수익성이 있나?

인적자본은 광범위의 경제이익과 비경제이익과 관련돼 있다. 실로 이로 보는 최대 이익 가운데 일부는 건강 향상, 수명 연장, 공동체 생활에의 참여 가능성 제고 같은 비경제적 차원일지도 모른다.

경제적으로는 개인의 번영이나 국민경제 차원에서 인적자본의 수익성을 이해할 수 있다. 개인 차원에서는 교육수준이 증대할수록 소득이 상당히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 덴마크, 뉴질랜드 등 일부 OECD 국가에서 대학 수료자는 중등교육만을 마친 자보다 소득이 4분의 1 가량 높으며 다른 국가에서 이 차이는 보다 두드러져 최고 120%까지의 차이를 보인다. 한편 개인이 교육에 보내는 기간을 1년 추가할 때마다 국민경제는 3-6%의 생산증가율을 보게 될 수 있다.

## 인적자본이 중요해지는 이유

최근 해 수많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인적자본의 경제적 역할에 주의가 집중되어졌다.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제조 품목보다는 데이터와 정보의 생산 및 운용에 더욱 의존하는 이른바 지식경제의 출현이다. 이러한 추세는 구글 같은 기업의 부상이나 근로자 직업 성질의 점진적 변화에 뚜렷이 반영된다. 요컨대 1995년 OECD 근로자의 대략 28%가 산업계에 있었고 63% 이상이 서비스 종사자였던 반면 이로부터 10년 후 산업계는 25%에 약간 못 미친 비중이고 서비스는 69%를 상회한 수준이었다.

지구화 역시 근로자의 일하는 방식과 직업 종류를 변화시키고 있다. 오늘날의 기업은 전세계에 널려 있는 생산자와 하청업자 구성의 기다란 사슬에 의지하며 또한 업무 조정을 위해 선진 통신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선진국의 제조업 일자리는 저렴한 가동노동을 갖춘 개도국으로 일부 옮겨지고 있으며 아울러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같은 더 고급의 일자리마저 일부 이전되는 상황이다.

마지막 요인은 사회의 고령화다. 인구구조 변화로 수많은 선진국에서 평균연령이 증가세이며 그 결과 향후 줄어드는 경제활동인구에 의지할 퇴직

인구수는 더욱 늘어날 조짐이다. 따라서 근로자들을 더 오래 일터에 머물게 하기 위해 힘쓰는 국가가 적잖이 있는데 사실 이 노력이 실현되려면 근로자의 기술·지식 갱신이 절대 필요해질 수 있을 것이다.

## 영유아가 중요한 이유

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은 점점 관심을 집중시키는 사안이다. 더 많은 여성이 일하러 나가는 상황에서의 아동보육방법이라는 순전한 실용적 차원의 문제로서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촉진되었다. 여성 노동참가율은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근 해 몇몇 국가가 급증가를 보였던 바 예로 스페인은 1994년 일하는 여성이 3분의 1에 못 미쳤던 반면 이로부터 10년 후 절반 가량으로 증가했다.

이 증가세는 아이를 갖은 후에도 노동인력으로 남고자 하는 여성 자체의 욕구가 어느 정도 부추겼다. 이에 반해 영어권 국가를 위시한 일부 국가에서는 부모가 계속 일할 것을 적극 권장한 결과이기도 하다. 실로 부모 모두 일하지 않거나 한 명만 일하는 가정의 아동은 생활이 빈곤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이 한 가지 이유가 된다. 이러한 자원 결핍은 아동의 교육·사회개발을 심각히 저해하고 이들이 성인기에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일하는 여성이 증가하면서 아동보육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많은 OECD 국에서 보육 서비스는 정부의 한정적 감시 아래 민간단체가 제공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보육 서비스의 품질과 영유아 개발에 대한 기여도는 북구 국가처럼 최고로 발전된 영유아 보육·교육 제도에 대조되는 수준을 보일 때 다소 우려해 볼 여지가 있다.

북구 보육은 전체론적 접근방법을 택함으로써 보육과 교육을 밀접히 결부시켜 아동이 초등학교로의 순조로운 진입을 누리게 하도록 힘쓰는 제도다. 이에 반해 다른 아동보육제도는 보육 또는 교육의 한 쪽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후자 경우인 독일의 킨더가르텐은 북구 접근법에 근거한 아동의 생활교육보다는 아동의 학교 입학에 준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영유아가 재미있게 배우는 방법으로도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고품질의 아동보육·교육은 모든 아동에게 이익이 되지만 빈곤 또는 이민 가정여건의 아동에게는 더 더욱 중요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교육경제학자들이 후자 아동이 이로써 볼 수 있는 적잖은 잠재이익수준을 내세우며 이 영역에 대한 정부 투자가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다.

## 교육의 대응안?

정식교육기간은 인적자본형성과 후일 생계유지에 필요할 지식기술을 청년기에 개발케 한다는 점에서 결정적이다. 불행히도 다수의 OECD 국에서 청년의 5분의 1 정도가 중등교육을 마치지 않으면서 취업전망과 소득잠재에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청년들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좋은 보수에 적당히 안정된 제조업의 가용일자리가 감소하면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 틀림없다. 우리는 학교를 일찍 떠난 청년을 교육제도에서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실은 교육제도가 이들 교육에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듯하다.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국제학생평가에서 월등한 성적을 이룩한 핀란드와 일부 국가들이 교사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과 교실에서의 상당한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 요소의 한 가지로써의 수업

품질에 대해 관심이 쏠려지는 상황이다. 학교운영 차원에서도 자율성은 하나의 쟁점 사안이다. OECD의 PISA 시험을 통해 학교가 자원분배와 교사 임명에서 큰 자유를 누릴수록 학생 성과도 높다는 점이 어느 정도 입증된다.

많은 국가정부들이 교육제도를 통해 순수학문교육에 대립된 직업교육의 기회를 중·고등교육 학생에게 다양히 제공하는 방향으로 더욱 힘쓸 수 있는 입장이다. 요컨대 학문수준의 향상과 고등교육 차원의 연구수준 고도화에 치중된 경쟁으로 산업특유 기술을 학생에게 가르치는 직업교육은 재원을 덜 받는 경향인 국가들이 적잖이 있었다.

물론 고품질의 대학교육은 혁신기술의 창안과 활용을 가속하면서 국민경제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며 국가의 인적자본축적에도 뚜렷한 기여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바로 이 부문에서 많은 유럽국은 오히려 뒤로 처지고 있다고 OECD의 안드레아스 쉐라이커는 주장했다. 대학을 수료한 청년 수 차원에서 프랑스, 독일 등의 주요 경제국가들을 복귀 국가, 한국 등의 국가들이 따라잡게 된 바, 이는 ‘전자 국가가 지식기술 개발에 있어 더 이상 전세계적 주도자가 아님’을 뜻하는 바다.

이에 맞서 유럽정부는 전세계적으로 부단한 논의주체인 교육자원분배의 향상을 위한 조사작업에 나설 듯하다. OECD 국가정부를 평균하여 GDP의 5% 가량이 교육에 할애되며 고등교육 학생에게 초등생의 2 배가 지출된다. 하지만 대학생은 일단 학위를 수료하면 다른 이보다 상당히 높은 소득을 받는 만큼 많은 국가에서 이들 각자에게 교육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빈곤한 가정 청년은 고등교육에 극히 적은 비율로 대표되는 것이 보통인 만큼 이러한 움직임은 사회 형평성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사실 생활이 어려운 부모에게 어차피 본인 자녀는 들어가지도 못할 대학의 자금조달을 위한 세금을 부과시킨다는 것은 틀림없이 불공평하다. 한편으로 고등교육 등록비 도입은 빈곤층 학생을 위한 보조금, 장학금, 관대한 학자금 용자 등의 적절한 대책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들의 대학 진입에 더 많은 장애물을 세울 수 있다.

## 훈련의 역할은?

최고 선진국이 겪는 인구 노령화는 사람들이 퇴직시기를 늦추도록 압력을 가하는 요소다. 그 결과, 일터에서의 급속한 변화에 근로자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각자의 기술교육을 계속 갱신할 필요가 커지는 상황이다. 또한 이 문제는 직업생애 말기에 있는 근로자만을 관련하지 않는다. 실로 모든 연령층의 노동인구가 기술력을 계속 증진해야 하며 이로써 소득전망 향상과 함께 실직 시에는 새 일자리를 수월히 찾게 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성인훈련은 노동인구 간에 고르게 확산되지 않았다. 젊고 이미 높은 자격수준을 갖춘 근로층은 고용주로부터 훈련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 실제로는 한정된 교육을 받은 자나 장년층 같은 근로자가 훈련을 가장 필요로 하나 이들이 훈련을 받을 가능성은 가장 낮다. 이 차이는 남녀 사이에도 드러나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훈련을 더 받는 입장이고 국가마다도 차이는 있어 덴마크 근로자는 직업생애의 거의 1000 시간을 비행식장의 직업 훈련에 보내는 반면 이탈리아는 100 시간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훈련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돕기로 나선 국가정부들이 상당히 있다. 몇몇 국가는 중앙직업훈련기금을 창설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활용할 수 있는 훈련

세금을 고용주에게 부과시키고 있다. 훈련기금 조달에 정부, 고용주, 고용인을 참여시켜 모두가 훈련사업 성공에 이해관계가 있게 하는 공동재정안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예로 캐나다는 성인학습의 기금조달을 위해 저소득 근로자가 저축하는 1 달러당 최고 3 달러까지 지불하는 특별저축계좌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아무리 기금조달 혼합방식이 우수하다 해도 성인에게는 동기부여가 핵심 요소로 남는다. 실로 가족부양과 일해야 하는 압력을 받는 성인들이 공부를 더 할 시간이 없다는 느낌을 갖게 될 수 있는 경우는 허다하다. 이러한 장벽은 성인들이 각자에 맞는 속도로 기간을 연장시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하면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다. 한국은 1998 년부터 신용은행제도를 실시해 왔는데 초기 5 년간 25,000 명이 이 제도로 정식자격 취득에 필요한 신용을 구축하게 되었다..

### 앞으로 과제사안은?

대중 교육은 20 세기에 더 많은 인구를 대상으로 더 많은 학교교육을 제공하면서 눈부신 확대를 이루었다. 현재 선진국의 의무교육은 청년층이 학교에서 보낼 것을 각오한 시일 기간으로 볼 때 결국 자연적 한계에 이른 수준이다. 따라서 향후 인적자본의 공급 증가는 교육 분량의 확장보다는 학습 품질 제고에 더 좌우될 것이다. 이는 사회가 가능한 많은 사람이 생애 전체에 걸쳐 각자의 재주 및 능력을 폭넓게 개발하도록 뒷받침해야 함을 뜻하는 바가 크다.

© OECD 2007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본 개요의 복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저작권 및 해당 출판물의 제목이 명시될 때에만 허가됩니다.

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붙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본 개요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온라인 서점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oecd.org/bookshop/](http://www.oecd.org/bookshop/)

자세한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rights@oecd.org](mailto:rights@oecd.org)

팩스: +33 (0)1 45 24 13 91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http://www.oecd.org/right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